

헌재 “세월호 7시간 답변 의혹만 키워”

“침몰 최초인지 시점 등 추가로 밝혀달라”…朴측 “시간대별 지시 녹음 파일 있다. 그렇게 생각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내놓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로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단은 “관저에서 시간대별 지시를 내린 녹음 파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단의 이종환(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최초로 인지한 시간은 당일 오전 10시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이진성 재판관은 “2014년 4월 16일 행적에 대해 (박 대통령 측에) 몇 가지 밝힐 것을 요청했고 오늘 답변서만 보았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보고나 지시에 대한 것은 기재했는데, 제가 밝히려는 것은 보고나 지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박 대통령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에 대해서 밝혀야 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답변서가 그에 조금 못 미쳐 부족하고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

몰 최초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안 나왔다”며 “답변서에 따르면 오전 10시 보고를 받아 알게 된 것처럼 돼 있는데 방송 등에서 오전 9시 조금 넘어서 보도됐는데 (그 전에는) 확인하지 않은 것인지 부분 등에 대해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답변서에 따르면 안보실장과 수차례에 걸쳐 전화했다고 돼 있지만, 답변서에 첨부한 3가지 자료는 국가안보실에서 박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낸 보고서”라며 “그밖에 자료도 제출을 요구했는데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12시 50분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통화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통화기록'이 증거로 제시됐지만, 김장수 안보실장과는 수차례 통화를 했다고 돼 있음에도 이에 대한 통화 기록이 없다며 확인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당일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며 “최초 인지시점은 오전 10시 국가안보 보고서를 받은 뒤이며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답변서

가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초 보고를 받은 뒤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오후 3시 중앙재난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했다”고 말한 뒤 “경호문제와 증대본으로 승용차가 돌진하는 범죄행위가 있었던 문제로 증대본 도착 시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3시35분에 미용 담당자가 들어와 박 대통령은 머리손질을 약 20분동안 했다”고 밝혔지만, 오후 5시15분께 증대본에 도착하기까지 약 1시간30분의 행적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당시 박 대통령이 증대본에서 ▲생존자 빨리 구하라 ▲증대본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 동원하라 ▲피해자 가족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라 ▲일몰전 생사확인해야 하니 모든 노력 기울여라 등 4개 지시를 내렸다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해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지시 시간대별 녹음 파일이 있다”며 “계속 집무실에 앉아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끊임 없이 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전주 청와대비서관이 오전 10시부터

박 대통령과 안봉근 당시 비서관이 함께 있었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선 “(윤전주 비서관의 증언을) 그렇게 듣지 않았다”며 “증언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TV를 통해 사고 소식을 접할 것을 권유했지만 박 대통령이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최초시기에 이를 증대한 사고로 인식했는지 여부는 확인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일)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체크하고 있었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재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빨리 필요하면 특공대도 보내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라” 이렇게 해 가면서 보고받으면서 하루 종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리인단과 사전 논의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엇박자’ 논란도 빚었다. /뉴스

검찰 “차은택, 송성각에게 좌편향 세력 색출 지시”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함께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재판에서 검찰이 “차 전 단장이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좌편향 세력을 색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운) 심리로 10일 열린 차 전 단장의 강요미수 등의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증거로 최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씨의 진술조서를 제시했다.

검찰은 “송 전 원장은 취임하기 전부터 차 전 단장에게 영화진흥원과 같이 콘텐츠진흥원에도 좌편향 세력이 많이 있을 테니 이를 색출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취임 후에도 좌편향 세력을 색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를 차 전 단장에게 들었다고 고씨는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전 원장은 2015년 2월 콘텐츠진흥원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며 “부원장 자리도 하나 더 늘려 자신의 지인을 앉혔다는 내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전 원장은 차 전 단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도움을 많이 준 사람으로 차 전 단장이 은혜를 갚고자 최씨에게 말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했다”며 “차 전 단장은 송 전 원장에게 문체부 차관 자리에 지원해 보겠다고 했다가 이후 경쟁자를 학력이 너무 뛰어나 어렵게 됐다며 콘텐츠진흥원 원장 자리에 지원해보라고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최씨가 차 전 단장을 통해 정부 인사를 추천받아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을 고씨의 진술을 통해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고씨는 최씨가 2014년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물 기획·제작 책임자를 찾아보라고 해 차 전 단장을 소개했다”며 “둘 사이에 친분이 형성되며 최씨가 차 전 단장을 박 대통령에게 소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씨는 최씨가 2014년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물 기획·제작 책임자를 찾아보라고 해 차 전 단장을 소개했다”며 “둘 사이에 친분이 형성되며 최씨가 차 전 단장을 박 대통령에게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차 전 단장에게 장관에 앉힐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했고 차 전 단장이 김종덕 전 장관을 추천하자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고씨는 말했다”며 “공은사 부근 개인사무실에서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듣고 봐서 그 과정을 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씨는 최씨가 문체부 장관 등 정부 인사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으며 ‘비선 실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차 전 단장의 외삼촌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청와대에 임명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 전 단장이 문체부 장관 인사까지 관여하다보니 영향력을 이용해 정부 관련 광고를 직접 수주하거나 다른 회사에게 수주해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고씨는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차 전 단장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및 직권남용관리행위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기업 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차 전 단장은 박 대통령 및 최씨, 안봉준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KT에 인사압박을 넣고 최씨와 함께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

국민의당 “김종인, 차을 대통령 만들어놓고…”

국민의당은 10일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2012년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짜잡아 비판한 데 대해 “장기관 앞에서 구경이라도 하게 끼워달라”고 칭얼대는 천덕꾸러기가 따로 없다”고 원색 비난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전 대표가 신이 나서 평가놀이에 몰입할 걸 보니 드디어 대선철이 왔나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2012년 김 전 대표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을 때가 아니냐”며 “김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 사기가 아니었다면 박근혜 정권은 탄생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반성은커녕 큰소리를 치는 김 전 대표 모습이 위안부 협상에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아베 총리를 연상하게 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소신도 신념도 없이 권력만 쫓다면 어디든 달려가 다섯 번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며 기회주의적으로 살아온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일등공신 김 전 대표는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계은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

더불어민주당, 11일 후보별 경선 료 의견청취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각 대선주자들의 대리인을 불러 경선 료에 관한 캠프별 의견을 듣기로 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11일) 9시 의원들을 모시고 예상 쟁점에 대해 1차적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11시 정도에는 후보자 대리인을 모시고 경선에 임하는 분들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경선 료에 대해 “하지는 대로 하자”며 백지위임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모바일투표제와 결선투표제 결합 방식 또는 후보 간 정책토론을 거치는 숙의배심원제 방식을 제안했다.

또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권의 공동정부 구성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현재 시점에 당내 경선 료 논의에 착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인 시점에서, 캠프별 이견을 좁히기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초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로 인선됐던 백재현 의원은 사의를 밝히고 1차 회의에 불참했다. 양 위원장은 “모 캠프에 깊이 관여해 본인이 고사했고, 당대표도 수용할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방문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10일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이진호 원장의 유해 중점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전북글로벌게임센터와 콘텐츠 코리아랩, 문화콘텐츠아카데미 등 시설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모야지오, 내인이즈, 픽스게임즈 등 도내 콘텐츠 기업이 개발한 VR(가상현실) 등 콘텐츠를 직접 체험했다.

위원회는 “지역특화 콘텐츠 창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음악창작소 및 웹툰 창작융합체험관 등을 구축하고 ICT 기반 공공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전북 글로벌게임센터를 활용해 기능성 게임 등 아이디어 기반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 기업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완수 위원장은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문화콘텐츠 산업을 항공우주 및 의약 바이오와 함께 미래 3대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모든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헌재, 최순실·안종범·정호성 16일 재소환… 고영태 등 증인채택

헌법재판소가 10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3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최순실(61)씨, 안종범(58)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16일 재소환기로 했다.

최씨는 16일 오전 10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오후 2시에 각각 소환된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변론에서 “다음 변론에도 이들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 3차 변론에서 헌재는 국회소추위원단과 박근혜 대통령측이 신청한 고영태(41)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소추위원단이 신청해 채택된 증인은 고씨를 비롯해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승철(58) 전경원 부회장이자, 유 전 장관에 대한 심문은 17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은 오후 2시, 고씨는 오후 4시에 각각 진행된다.

박 대통령측은 류상영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류 전 과정의 증인심문에 대해 “고씨와 류상영 전 과정을 같은 날짜에 분리해서 소환하고 류 전 과정이 고씨에 대한 심문 내용을 듣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측은 “고씨와 류 전 과정의 대질심문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박 대통령측의 증인채택 요청을 수용, 류 전 과정을 17일 오후4시에 소환기로 결정했다. /뉴스

특검, 삼성 최지성·장충기 구속영장 청구 방침

최 실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 국민연금 관계자 만나… 장 차장, 최씨 지원 직접 관여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삼성그룹의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전날 오전 10시께 특검팀에 출석해 10일 오전 5시께까지 1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선별할 거 같기는 하지만, 일단은 두 사람 모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며 “일괄 청구할지, 따로 할지 등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에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던 주요 경영진 중 한명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날 6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 실장으로부터 정유라(21)씨를 지원한 것에 대해 처음 보고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최 실장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표 이전 공단 측 관계자를 만나 관련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장 차장(사장)은 삼성의 대외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임원으로 최씨에 대한 지원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주요 인물로 꼽혀왔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뉴스

현재 특검팀은 2015년 7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찬성표 던진 후 이어진 삼성의 최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에 수사 역량을 모으고 있다.

삼성엔 최씨 회사와 220억원의 계약을 맺고 이후 미르·K스포츠 재단에는 204억원을 후원했다. 정씨의 독일 훈련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 회사에도 94억원이 넘는 돈을 냈다. 이 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표가 있었다는 것이 특검팀의 의심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최씨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련의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뉴스

특검 “장시호, ‘제2의 최순실 태블릿PC’ 제출”

삼성그룹 최씨 일가 특혜 지원 관련 이메일 등 확인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로부터 최씨가 사용한 제2의 태블릿PC를 넘겨받았다.

특검팀은 해당 태블릿PC에서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특혜 지원 관련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장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태블릿PC 한 대를 임의 제출받아 입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는 최씨가 2015년 7월경부터 2015년 11월까지 사용했기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메일 계정, 사용자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 정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태블릿PC는 최씨 소유”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해당 PC에서 최씨의 독일 코페스스포츠 설립 및 삼성그룹 지원금 수수와 관련한 다수의 이메일을 발견했다. 2015년 10월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말씀자료 중간 수정본 등도 확인했다.

이 특검보는 “태블릿PC에서 문건보다는 다수의 이메일이 발견됐다”며 “이메일 내용은 주로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타 범죄와 관련된 이메일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뉴스